

## 지역 공공의료원 물꼬트나...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군불'

광주시·의회, 정부에 잇단 건의...타 지자체와 한 목소리  
국회서도 긍정적 신호...정세균 총리 "정부 적극적 협력"

공공 의료 설립이 원점에서 재논의되면서 공공의료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론이 무르익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와 부산, 대전 등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의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공의료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사업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난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시·도 중 광주, 대

전 등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 등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광주시는 예타 면제를 위해 대전, 부산 경남 등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업체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대전과 부산 등과 협업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쳤다"면서 "행정적으로 국가재정법 38조에 긴급한 재난예방이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사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면제가 가능한 만큼 다른 시도와 연대를 통해 면제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타 면제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왔다.

최근 민주당 남인숙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의료체계 구축 시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전의료원의 경우 예타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사

업적, 경제적으로도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회가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공공의대가 원점에서 재논의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체계 보완 관

점에서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면제가 활발한 논의되고 있다"면서 "총리의 의지가 있는 확실한 만큼 기재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며느라, 효도해라!

민족 대명절 추석 한가위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1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로에 내걸린 현수막 글귀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 전국 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에 '영광군' 우뚝

2.54명 압도적...해남 1.89명 2위

영광군이 전국 시·군·구별 기초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지칭한다.

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19년 호남·제주 출생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은 합계출산율 '2.54명'을 기록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영광군 다음으로 해남군(1.89명), 전북 진안군(1.69명)·순창군(1.64명), 전남 완도군(1.57명) 순으로 높았다.

합계출산율 상위 5개 지자체 중 영광군, 해

남군, 완도군 등 3개 지자체가 포함된 데 힘입은 전남(1.23명)은 전국 시·도별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영광군을 제외한 호남·제주 모든 지역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체계적인 인구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권 지자체의 합계출산율은 높은 편으로 분류됐지만 출생아 수는 전북 전주시(3502명), 제주시(3419명), 광주 광산구(2658명) 순으로 많았다. 호남과 제주의 출생아 수만 비교했을 때는 전남(1만800명)이 가장 많았고, 전북(9000명), 광주(8400명), 제주(4500명) 순이었다.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전남 구례군(33.39세)이 가장 높았고, 광주 남구(33.27세), 동구(33.03세), 제주시(32.97세), 광주 서구(32.95세)가 뒤를 이었다. 이 중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제주가 35.6%로 가장 높았다.

전북 임실군(31.29세)과 전북 김제시(31.34세)는 상대적으로 평균 출산연령이 낮았다.

셋째 이상 출생아 구성비는 전남 보성군(26.1%)과 완도군(23.8%) 순으로 높았고, 광주 북구(9.2%)가 가장 낮았다.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제주시(430명)가 가장 많았고, 전북 전주시(342명), 광주 광산구(305명)가 뒤를 이었다.

영광=서희권기자

## 고흥군 39개 사회단체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생존권 위협으로 간주...대대적 주민 반대 투쟁 전개

고흥군 청정 고흥연대 등 39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광주 군 공항의 고흥 이전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단체 대표들은 21일 군청 우주 홀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는 광주 군 공항 고흥 이전에 대해 한목소리로 결사반대 입장을 결의했다. 단체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경위 및 문제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각 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지역의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 운동에 돌입하기로 다짐했다.

군 공항이 들어설 경우 지선주민들의 농업, 어업, 축산업 및 환경피해가 심각할 것이며, 전투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살 수가 없을 것이

라고 단정했다.

청정 고흥연대 이정식 대표는 "군 공항 이전 검토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군수 및 의장의 초기 성명서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했으며, 우리 군 국회의원과 출향 향우와 연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태 지방협회장은 "고흥은 삼면이 바다인데 소음으로 인해 어업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정상수 군 한우협회장도 "소음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로 군 공항 이전에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정선용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 농수산물엔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